

기업인 대상 최신 반부패 정책 자료집(2026년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기업의 청렴·윤리 경영 문화 확산을 지원하기 위하여 최신 주요 반부패 정책 자료집을 홈페이지에 정기적으로 게시하고 있습니다. 기업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주요 내용 (총 5건)

- ①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26.8.3.)
- ②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26.8.7.)
- ③ 부패 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26.8.26.)
- ④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26.8.27.)
- ⑤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26.8.28.)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정책·정보 → 부패방지 자료실 → 청렴정책)

■ 문의사항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정책총괄과(044-200-7614)

“직접 경험한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 30만 국민과 공직자가 평가한다

- 국민권익위, 2026년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 실시, 8월부터 11월까지 전화·문자·카카오톡·이메일 통해 진행
-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 발표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부패 취약분야를 개선하기 위해 8월부터 ‘2026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설문조사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공직유관단체 등 공공기관의 업무를 직접 경험한 국민과 내부 공직자 약 30만 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의 업무 처리 과정에서 체감한 청렴 수준과 부패 경험 등을 조사한다.

□ 종합청렴도는 ▲국민과 공직자가 체감한 청렴 수준을 조사하는 청렴 체감도, ▲기관의 반부패 정책 추진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과 신뢰도 저해 행위를 반영하는 청렴도 감점의 세 영역별 평가 결과를 종합해 산정하며, 그 중 이번 설문조사와 관련된 영역인 청렴체감도는 국민과 공직자의 실제 경험과 인식을 반영하는 핵심 평가영역이다

< 2026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체계 >

종합청렴도 (100점 만점)			
	청렴체감도 (60%)	청렴노력도 (40%)	청렴도 감점 (최대 15%)
내용	외부업무 및 조직 내부 운영 전반에 대해 국민·내부 공직자를 대상으로 부패 인식·경험 측정	기관의 반부패 시책추진 및 노력을 미리 설정된 지표에 따라 평가	부패사건 발생 현황, 부패방지 업무 미이행, 신뢰도 저해 행위를 감점으로 반영
방식	설문조사	정량·정성평가	정량·정성평가

※ 신뢰도 저해 행위의 경우, 감점 외에 등급하향, 최하위등급 부여, 언론공표 가능

- 청렴체감도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는 전화·문자메시지·카카오톡·이메일 등을 통해 8월부터 11월 초까지 약 4개월 동안 실시되며, 응답자의 개인정보와 응답 내용은 암호화 과정을 거쳐 철저히 보호되므로 안심하고 참여할 수 있다.
- 국민권익위는 설문조사 결과와 청렴노력도, 청렴도 감점 평가결과를 종합해 올해 12월 579개 공공기관의 종합청렴도 등급을 발표할 예정이다.

각 기관은 평가 결과를 통해 확인된 기관별 부패 취약분야를 분석하고 기관 특성에 맞는 맞춤형 개선대책을 마련하여 이행해야 한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국민이 체감하는 청렴 수준을 정확히 진단하는 것이 공공부문 변화의 출발점이다.”라며, “국민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공공부문의 변화를 이끄는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이번 설문조사에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밝혔다.

“2025년 부정수급 환수 등 제재 처분, 총 1,796억 원!” 역대 최대규모 부과

- 국민권익위, 311개 기관 대상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 발표
- 2024년 대비 환수 결정액 24%, 제재부가금 74% 증가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정부, 교육청 등 311개 기관*의 공공재정지급금 부정수급에 대한 2025년도 제재 처분 현황을 대상으로 ‘공공재정환수제도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정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 2020년 1월 1일 시행된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지급금을 부정수급한 경우 부정이익을 환수하고 그 가액의 5배 이내 제재부가금 부과

* 공공재정지급금: 법령 등에 따라 공공재정에서 반대급부 없이 지급되는 보조금·보상금·출연금 등

□ 이번 점검은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척결 중 하나인 부정수급 근절을 위해 제재 처분 현황을 점검하여 공공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고, 재정 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 국정과제 16. 국민권익을 실현하는 반부패개혁

* 7대 사회악: 부동산 불법행위, 주가조작, 고액악성체납, 보이스피싱, 마약범죄, 중대재해, 보조금 부정수급

□ 점검 결과, 311개 공공기관이 총 141,781건의 부정수급에 대해 1,296억 원을 환수 결정하고 500억 원의 제재부가금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도인 2024년 환수 결정액 1,042억 원 대비 24%, 제재부가금 부과는 288억 원 대비 74%가 상승하는 등 큰 폭으로 증가

하였다.

주요 원인으로는 ▲공공재정지급금 지급 규모 증가, ▲국민권익위를 포함한 각급기관에 부정수급 신고 증가, ▲부정수급 점검 활동 강화 등에 따른 적발 및 제재 처분 증가, ▲제도 교육 및 컨설팅 시행 등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 노력 등이 있다.

< 주요 부정수급 사례(환수금액 순) >

- 실제 경작하지 않음에도 본인이 경작한 것처럼 **농업직불금**을 수급
- 혼인·사실혼 관계를 숨기고 **한부모가족지원금**을 수급
- 지원대상이 아닌 차량에 주유하거나, 폐업상태에서 **유가보조금**을 수급
- 실제 근로제공 사실 없이 근로를 제공한 것처럼 **국가근로장학금**을 수령
- 출·퇴근부·훈련실시 현황 등을 허위로 작성하여 **고용안정장려금**을 수령

- 공공재정지급금의 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생계급여에서 290억 원이 환수 결정되어 가장 금액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산업·중소기업·에너지분야 지원금 229억 원, 주거급여 103억 원 순이었다.

환수 증가율이 가장 높은 공공재정지급금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으로 32억 원을 환수해 전년(6억 원) 대비 약 412%(26억 원)가 늘어났다. 이는 매년 전기자동차 및 화물차의 보급물량 급증으로 환수대상 규모 자체가 커진데다, 관할기관이 관리 감독을 강화하면서 환수실적이 커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어서 생계급여가 전년 대비 약 9% (23억 원) 늘어난 290억 원이 환수되었다.

한편, 제재부가금 규모가 가장 큰 공공재정지급금은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으로 전년도 보다 14억 원이 증가한 약 85억 원이 부과되었으며, 이어서 클린사업장 조성지원금*에서 79억 원이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 중소사업장(상시 50인 미만 등)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개선

비용 지원(고용노동부)

- 공공재정지급금을 집행하는 기관유형별 환수현황 등을 살펴보면, 각종 복지급여 및 보조금 등을 집행하는 기초지방정부가 가장 많은 667억 원(51.4%)을 환수하였다.

제재부가금 부과는 중앙행정기관이 329억 원(65.7%)으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재정지원 규모가 크고, 연구개발 및 고용 관련 법령에 제재부가금 부과 근거가 잘 마련되어 있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점검 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 국민권익위 이명순 부위원장은 “공공재정지급금의 부정수급은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이를 뿌리 뽑을 수 있도록 제도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적극적인 처분 요구, 신고 활성화를 통해 공공재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엄격하게 관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부패없는 청렴한 민선 9기 지방행정을 위해 감사관들이 한자리에 모인다!

- 국민권익위, 민선 9기 지방정부 감사관들과 소통의 장 마련
- 선출직 공직자 등 고위공직자 준수사항 및 지방정부 청렴성 제고를 위한 하반기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 공유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민선 9기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지방정부와 직접 소통하며 청렴정책 추진 방향을 논의하고, 현장의 의견을 듣기 위해 오늘(26일)부터 내일(27일)까지 감사관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8월 26일 : 기초시·군·구 / 8월 27일 : 광역시·도, 광역의회, 시·도교육청

이번 회의는 지방정부의 감사관이 참여하여 민선 9기 고위공직자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과 하반기 반부패 제도의 운영 방향을 공유하고, 일선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운영 관련 건의사항 등 지방현장의 의견을 듣는 소통의 장으로 마련되었다.

□ 반부패 제도 운영 방향의 주요 내용으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 제도 강화, ▲제도개선을 통한 불공정 유발 요인 해소 등 관행화된 부패근절,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종합청렴도 평가 및 청렴윤리경영 운영 지원 내용 등을 공유한다.

□ 국민권익위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지방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부패·불공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전방위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올해 하반기에는 반부패 제도 운영 현황에 대한 실태점검과 더불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그리고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시·도 교육청을 제외한 지방정부의 자치법규를 전수점검한 데 이어 2026년 12월까지 시·도 교육청이 소관하는 약 5,000개 자치법규를 대상으로 관행적 부패·불공정 요인을 발굴하여 개선을 권고할 계획이다.

- 이와 함께 지방 공공기관 채용비리 근절을 위해 전년도 채용실적이 있는 지방정부 산하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실태를 점검하고, 채용비리 연루자에 대한 징계요구와 피해자 구제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국민권익위 정일연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국가청렴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일선 현장에서 국민과 소통하는 공직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국민권익위는 지방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향상이 국민에게 체감될 수 있도록 민선 9기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최근 3년간 공공재정 부정수급 들여다보니...

“환수 건수는 줄고 금액은 늘어...”

- 국민권익위 “공공재정 부정수급 데이터 분석을 통해 고위험 사업 정밀 측정”
- “기관·사업별 부정청구 위험 특성에 따른 관리 필요”...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예정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3년부터 2025년까지 공공기관*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등 처분 데이터 약 52만 2천 건을 바탕으로, 사업별 위험 수준과 유형을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 중앙행정기관 51개, 지방행정기관 243개, 시·도 교육청 17개

이번 분석은 국정과제와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7대 사회악 중 하나인 보조금 부정수급 근절과 데이터 기반의 부정수급 관리 체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를 위해 국민권익위는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 부정수급 사건당 평균 환수 금액, 고의성 등을 분석하고, 사업별 부정수급 발생 위험 수준을 살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건수와 금액을 분석한 결과 최근 환수처분 건수는 2023년 210,322건에서 2025년 141,781건으로 68,541건 감소했으나, 환수처분 금액은 2023년 1,108억 원에서 2025년 1,296억 원으로 188억 원 증가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발생 위험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 생계급여가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은 사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 등 대도시권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아울러,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특성별 맞춤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부정수급 발생 위험의 성격을 고의적인 부정수급이 많은 ‘고의형’, 환수 금액이 큰 ‘규모형’, 오지급이 반복되는 ‘오지급형’으로 나눠 유형별로 분석했다.

〈 공공재정 부정수급 위험 분류 〉

고의형	규모형	오지급형
측정기준: 고의성**	측정기준: 환수 금액	측정기준: 오지급 비중·건수

* 위험도지수: 환수건수(정규화) × 25% + 환수총액(정규화) × 25% + 건당금액(정규화) × 20% + 고의성(정규화) × 30%

** 고의성지수: (허위청구건수 × 5 + 과다청구건수 × 3 + 목적외사용건수 × 2) ÷ (전체건수 × 5)

허위청구, 과다청구 및 목적외 사용 건수에 대해 제재부가금 부과율 가중치를 적용해 계산한 고의형 고위험 사업의 경우 청년고용지원 관련 급여 지급 사업에서 부정수급 발생 위험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규모형 고위험 사업은 생계급여, 주거급여, 사회보험료 지원 순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사업은 친환경자동차보조금,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 순이었다.

오지급형은 고의적인 부정청구가 아닌, 자격·소득 등의 변동이 뒤늦게 반영되면서 이미 지급한 금액을 환수하는 사례가 많은 유형으로, 전체 환수 건의 73.5%가 오지급에 해당했다. 사회보험료 지원, 생계급여, 주거급여 등에서 오지급이 반복해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주요 사례 〉

- (고의형) 근로하지 않은 사람을 근로자로 위장 고용하고 고용보험 자격 취득을 허위 신고하여 청년일자리창출지원금을 수령
- (규모형) 지원받은 설비를 임의로 매각하거나 공급업체로부터 대금 일부를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클린사업장조성지원금을 부정수급
- (오지급형) 수급자의 소득·재산·가구원 변동이 뒤늦게 확인되어 과다 지급된 생계·주거급여를 환수

- 기관유형별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앙행정기관의 경우 해당 기관유형의 전체 환수액 중 오지급으로 인한 환수액이 52.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목적 외 사용으로 인한 환수액이 49.6%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기관 유형 중 가장 많은 금액인 1,836억 원을 환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도교육청은 전체 환수 규모는 가장 작았으나 건당 평균환수액은 227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공공재정 지급 이후 환수 처분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시·도교육청(23.7개월), 중앙행정기관(16.0개월), 광역자치단체(13.6개월), 기초자치단체(10.2개월) 순으로 나타났다.

〈 2023~2025년 기관유형별 공공재정 부정수급 환수 현황 〉

기관유형	환수액(억원)	환수평균금액(만원)	환수건수(만)
중앙행정기관	1,319	55	23.8
광역자치단체	181	124	1.5
기초자치단체	1,836	69	26.5
시·도교육청	109	227	0.5

- 국민권익위는 이번 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선 최근 3년간 환수 규모가 급증한 분야를 선정하여 오는 10월 보조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 국민권익위 한삼석 사무처장은 “공공재정 부정수급은 기관과 사업에 따라 환수 규모, 고의성, 발생 유형 등 위험 양상이 서로 다르게 나타난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이번 분석에서 확인된 위험 특성과 취약 요인을 관련 정책의 수립과 개선에 활용해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고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공직자로서의 인식제고를 위한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국민권익위, 3년 차 공직유관단체 대상 행동강령 운영·이행 실태점검 실시
- 심야시간·공휴일에 업추비 사용 등 부적정한 예산집행 2,145건 확인
- 미흡 기관 대상 맞춤형 제도개선 권고 등 행동강령 제도 안착 지원

□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정일연, 이하 국민권익위)는 2022년에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되어 올해 3년 차를 맞은 50개 기관 중 정원 기준 상위 30% 15곳을 대상으로 공직자 행동강령의 운영과 이행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은 공직유관단체 지정 이후 3년이 지난 기관의 행동강령 제도 운영을 지원하고 소속 임직원들의 공직자로서의 인식 제고를 위해 추진됐다.

□ 실태점검 결과 행동강령 준수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 예산의 부적정 사용 등 일부 미흡 사례가 확인됐다.

〈주요 지적 사례〉

- 행동강령 준수 여부 자체 점검 및 교육 미실시(5개 기관)
- 심야시간대(23시 이후) 또는 공휴일에 요리주점, 제과점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고 사용 불가피성에 대한 소명 부재(5개 기관, 24건)
- 업무추진비 집행 시 ‘클린카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증빙자료에 집행인원을 누락하는 등 예산집행 부적정(6개 기관, 1,593건)
 - * 클린카드 : 공공부문 내부통제 강화방안의 일환으로 '제한업종'에서 사용이 안되는 공공구매카드
 - ** 제한업종 : 유흥주점,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골프연습장, 노래방, 오락실 등
- 직원이 아닌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에게 인사이동을 축하하는 화환을 보내거나, 소속기관 직무와 무관한 지역 사찰의 상량식에 기관장 명의 화환을 보내는 등 경조사비 예산 부적정 사용(3개 기관, 8건)

■ 국외 출장 중 예산으로 차량을 임차해 현지에서 사용하면 개인이 지급받는 출장여비 중 일비를 감액(1/2)하여야 함에도 이를 감액하지 않거나, 출장 국가·도시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액이 다름에도 이를 위반한 출장여비 과다 지급(7개 기관, 517건)

- 국민권익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각 기관에 통보하여 예산 집행절차 등 제도개선을 권고하는 한편, 예산의 사적 사용 행위 등에 대해 자체 조사 후 징계·환수·재발방지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점검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공직유관단체에도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전파하여 공직 사회에 행동강령 제도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정일연 국민권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할 수 있도록 미리 점검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이어서 “국민권익위는 앞으로도 공직유관단체의 행동강령이 현장에서 충실히 작동하도록 공직유관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